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제11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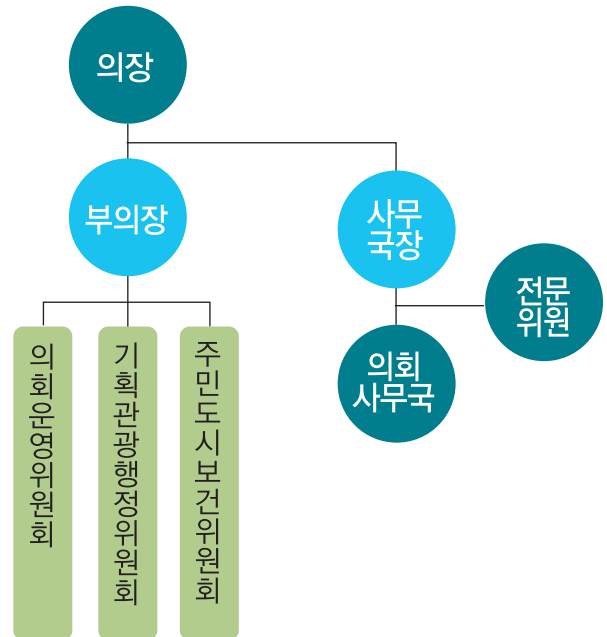
HAEUNDAE COUNCIL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7대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의원현황

(2014. 7. 1~2016. 6. 30)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 원 : 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직 원 : 17명



의장 이 문 환
Chairman Lee Moon Hwan



부의장 이 명 원
Vice chairman Lee Myung Won



임 말 속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Lim Mal Suk



황 병 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Hwang Byung Du



심 윤 정
주민도시보건의위원장
Member Shim Yun Jung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서정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김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m Soo



유점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You Jum Ja



최영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Choi Young Gon



서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Chang Woo



조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Jo Young Jin



김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Jeong Wook



홍성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Hong Seong Un



오경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O Kyeong Mi



손유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hon Yu Jung



정성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Jeong Seong Cheol



서강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Kang 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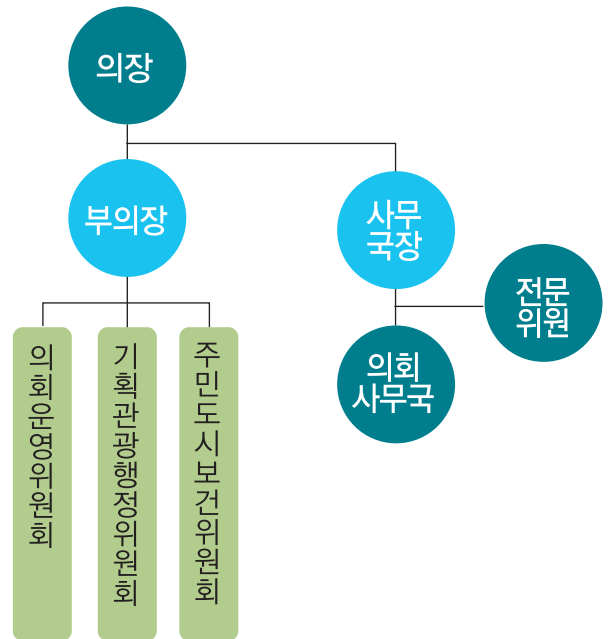
HAEUNDAE COUNCIL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7대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의원현황

(2016. 7. 1~2018. 6. 30)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 원 : 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직 원 : 17명



의장 정 성 철
Chairman Jeong Seong Cheol



부의장 이 명 원
Vice chairman Lee Myung Won



서 정 학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조 영 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Jo Young Jin



임 말 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
Member Lim Mal Suk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심 윤 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him Yun Jung



손 유 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hon Yu Jung



김 정 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Jeong Wook



최 영 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Choi Young Gon



서 창 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Chang Woo



서 강 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Kang Sik



홍 성 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Hong Seong Un



이 문 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Lee Moon Hwan



김 삼 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m Soo



황 병 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Hwang Byung Du



오 경 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O Kyeong Mi



유 점 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You Jum Ja



제II호 Contents

2017. 1. 1. ~ 2017. 12. 31.

발행인 의장 정 성 철
발행 해운대구의회
편집 의회사무국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5	인사말
6	해운대구 현황
7	의회연혁
8	의안처리
16	의원발의
23	구정질문
33	5분 자유발언
52	의원칼럼
60	의정스케치

Greetings by Chairman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시작한 제7대 의회가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해운대구 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의회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구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 60여건을 처리하였고, 구민이 궁금해하는 현안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 해운대”를 만드는데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운대구 의회는 구민이 주인이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언제든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의원
의장 정 성 철

해운대구 현황

The present condition of Haeundae Gu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수도 부산의 관광지로 신라말의 석학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자(字) "해운(海雲)"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는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 언덕, 해운대 온천 등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이 있는 사포지향(四抱之鄕)의 고장이며 관광의 도시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서 달맞이온천축제, 모래축제, 바다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열리고 아쿠아리움, 요트경기장, 벅스코와 미술관, 갤러리, 추리박물관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이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중심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초고층 주거단지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국제전시·컨벤션 센터인 제 1,2벅스코가 조성되어 있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입니다.

지하철 2·3·4호선, 광안대로, 부·울고속도로 복선화에 이어 센텀~만덕 도시고속화 도로가 착공되는 등 명실상부한 동부산권 교통·물류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인 구 : 약 411,827명

면 적 : 51.45km²(부산 768.4km²의 6.7%)

행정기구 : 4국 1실 1관 21과 97담당 1보건소(2과2지소) 3사업소

공 무 원 : 971명(공무원1인당 주민수 424명)

재정규모 : 4,976억원 (2017. 12. 31.기준)



의회 연혁

제7대 해운대구의의회 2014~2018

2016. 07. 16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6. 7. 16~2018. 7. 15) | 의장 : 정성철(鄭成澈),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4. 07. 16 제7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4. 7. 16~2016. 7. 15) | 의장 : 이문환(李文煥),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4. 07. 01 제7대의회 개원 2014. 06. 04 제7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6대 해운대구의의회 2010~2014

2012. 07. 06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2. 7. 6~2014. 6. 30) | 의장 : 이안호(李岸鎬), 부의장 : 홍성운(洪性雲)
2010. 07. 06 제6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0. 7. 6~2012. 7. 5) | 의장 : 라외순(羅外順), 부의장 : 윤병주(尹炳柱)
2010. 07. 01 제6대의회 개원 2010. 06. 02 제6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5대 해운대구의의회 2006~2010

2010. 01. 01 위원회 명칭 변경(기획주민행정 → 기획관광행정, 관광환경도시 → 주민도시보건)
2008. 07. 05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8. 7. 6~2010. 6. 30) | 의장 : 안상호(安相浩), 부의장 : 정성철(鄭成澈)
2006. 07. 06 제5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6. 7. 6~2008. 7. 5) | 의장 : 박선동(朴先同), 부의장 : 서강식(徐江植)
2006. 07. 01 제5대의회 개원
2006. 06. 30 위원회 명칭 변경(기획총무 → 기획주민행정, 사회도시 → 관광환경도시)
2006. 05. 31 제5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4대 해운대구의의회 2002~2006

2004. 07. 0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4. 7. 10~2006. 6. 30) | 의장 : 김용환(金容煥), 부의장 : 정장춘(鄭長春)
2002. 07. 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2. 7. 10~2004. 7. 9) | 의장 : 김영수(金榮秀), 부의장 : 양철용(梁哲容)
2002. 07. 01 제4대의회 개원 2002. 06. 13 제4대의원 선거(15명)

제3대 해운대구의의회 1998~2002

2000. 07. 07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0. 7. 8~2002. 6. 30) | 의장 : 박정희(朴正禧), 부의장 : 허 훈(許 燾)
1998. 07. 08 제3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8. 7. 8~2000. 7. 7) | 의장 : 정홍정(鄭弘政), 부의장 : 윤정춘(尹晶春)
1998. 07. 01 제3대의회 개원 1998. 06. 04 제3대의원 선거(14명)

제2대 해운대구의의회 1995~1998

1997. 04. 12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 → 기획총무)
1996. 12. 31 제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7. 1. 10~1998. 6. 30) | 의장 : 신중복(愼重福), 부의장 : 황준연(黃峻淵)
1995. 07. 10 제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5. 7. 10~1997. 1. 9) | 의장 : 윤경현(尹慶鉉), 부의장 : 박정희(朴正禧)
1995. 07. 01 제2대의회 개원 1995. 04. 12 제2대의원 선거(20명)

초대 해운대구의의회 1991~1995

1995. 05. 29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 → 총무, 도시산업 → 사회도시)
1994. 03. 10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산업 → 총무사회, 도시 → 도시산업)
1993. 04. 13 초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3. 4. 15~1995. 6. 30) | 의장 : 최해주(崔海柱), 부의장 : 신중복(愼重福)
1992. 03. 12 상임위원회 설치(총무사회산업, 도시, 의회운영)
1991. 04. 15 초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1. 4. 15~1993. 4. 14) | 의장 : 이태옥(李太玉), 부의장 : 최해주(崔海柱)
1991. 04. 15 초대의회 개원 1991. 03. 26 초대의원 선거(20명)

해운대의정

의안 처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의안처리현황

◇ 총 괄

구분	합계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동의안	건의·결의·추천안	규칙안	기타
계	122	68	5	18	4	3	24

◇ 회기별 현황

회기별	회 기 (일수)	심의처리	
		조례	기타(조례외)
구 분	합 계	68	54
제225회 임시회	'17. 02. 21. ~ 02. 28. (8일)	15	8
제226회 임시회	'17. 04. 13. ~ 04. 25. (13일)	13	7
제227회 임시회	'17. 05. 18. ~ 05. 24. (7일)	6	2
제228회 정례회(제1차)	'17. 06. 13. ~ 06. 23. (11일)	6	3
제229회 임시회	'17. 09. 01. ~ 09. 08. (8일)	10	5
제230회 임시회	'17. 10. 13. ~ 10. 24. (12일)	8	7
제231회 정례회(제2차)	'17. 11. 20. ~ 12. 22. (33일)	10	22

◇ 조례심의 결과

구분		발의·제출			심의결과				기타 (보류, 철회 등)
		계	의원	구청장	계	원안	수정	부결	
계		71	23	48	68	55	12	1	3
조례	제정	22	16	6	20	15	4	1	2
	개정	48	7	41	47	39	8	—	1
	폐지	1	—	1	1	1	—	—	—

의안처리

제225회 임시회

(2017. 2. 21 ~ 2. 28)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 제10기 해운대자연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 ◇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서창우, 유점자 의원)

기타

- ◆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촉구 결의안 ▶ 철회
- ◆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
- ◆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226회 임시회

(2017. 4. 13 ~ 4. 25)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구청 내 철골주차장 설치) ▶보류
-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좌4동 문화센터 건립)
-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서정학, 서창우 의원)

기타

- ◆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버스중앙차로(BRT) 사업 철회 결의안 ▶부결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처리

제227회 임시회

(2017. 4. 22 ~ 2, 28)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최영곤, 유점자, 김삼수 의원)

제228회 정례회

(2017. 6. 13 ~ 6, 23)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서정학, 유점자 의원)

기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29회 임시회

(2017. 9. 1 ~ 9. 8)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보류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
- ◇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구정질문 (최영곤 의원)

기타

-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처리

제230회 임시회

(2017. 10. 13 ~ 10. 24)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기획관광행정·주민도시보건위원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최영곤, 임말숙 의원)

기타

- ◆ 『부산 해운대 마린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 ▶부결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31회 임시회

(2017. 11. 20 ~ 12. 22)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심의안건

-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 · 기획관광행정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해운대문화원 건립)
- ◇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해운대보건소 증축) ▶부결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 ◇ 201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수정
- ◇ 201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수정안
-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 구정질문 (이명원, 손유정, 이문환, 유점자 의원)
- ◆ 5분자유발언 (유점자, 이명원, 조영진, 김삼수 의원)

기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업무계획 보고, 업무실적 보고
- ◆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 ◆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 · 기획관광행정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해운대의정

의원
발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 의원발의 의안(조례, 규칙) 현황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25회 임시회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임말숙 손유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임말숙 최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손유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심윤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서창우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회운영 의회운영
제226회 임시회	임말숙 김정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최영곤 김정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27회 임시회	손유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조영진 서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제228회 정례회	심윤정 최영곤 서창우 서강식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최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심윤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제229회 임시회	심윤정 의원 외 15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손유정 임말숙 이문환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보류	기획관광행정
	임말숙 손유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의원발의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29회 임시회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주민도시보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심윤정 서창우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의회운영
제230회 임시회	김삼수 이명원 이문환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오경미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황병두 홍성운 이문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서정학 오경미 심윤정 손유정 김정옥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제231회 정례회	서정학 의원 외 16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심윤정 이문환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김삼수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취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호선하도록 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며,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의정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취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삼지 공원 등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취지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취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민간위탁 사무의 꾸준한 증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구의회 동의의 범위 확대, 제3자 양도 금지의 신설 등을 통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지 「아동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취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해운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취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임말숙
의원

의원발의

손유정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취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취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보류

취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조영진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규정 중 연임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 조례 준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경미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한과 결산 승인 시기가 단축되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취지 「도로법」 제91조제2항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함

심운정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취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취지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전부개정조례안

취지 조례 제명 변경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취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취지 해운대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해운대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를 반영하여 공익 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최영곤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취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의원발의

황병두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서정학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취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규정하고자 함

서창우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취지 회의규칙 중 회의록과 관련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배부·공개 되는 회의록의 불게재 신청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지 배부 회의록의 불게재 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의 표기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해운대의정

구정 질문

◆ 구정질문현황

회기별	질문자	내 용
제229회 임시회	최영곤	블루라인파크사업! 해운대 미래교통 10년을 내다보면서 신중히 결정하라.
제231회 정례회	이명원	애견교육장 조성 경과 및 계획
	손유정	과연 청사 이전 바람직한가?
	이문환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
	유점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구청질문



최영곤 의원

2017. 9. 8. 제229회 임시회

블루라인파크사업!

해운대 미래교통 10년을 내다보면서 신중히 결정하라.

Q 미래 해운대구의 가장 골칫거리이면서 우선과제는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밀집도가 높은 우동과 중2동 달맞이에서 최근 계획 중 혹은 계획을 철회한 대형 사업을 총괄해보면, 과연 구가 미래교통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며, 부산시가 주도하는 BRT사업, 블루라인파크사업, 뉴스테이사업과 청사포공원 조성사업은 뜻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철회되었지만, 당시 우리 구는 시의 입장을 동조 내지 대변하고 오로지 외형적 개발에만 몰두하는 듯합니다. 향후 5년 내지 10년 내 계획 중인 교통대책은?

A 구에서는 해운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 도로확장, 그리고 수영강변대로와 삼어로간 연결도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은 제2장산로와 신시가지와 반송을 가로지르는 제2장산터널, 광안대로 연결램프, 센텀 만덕간 대심도 등으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진행 중인 BRT사업(잠정중단)에 대한 구의 입장은?

A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부산시의 대중교통중심 정책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는 원동에서 운촌삼거리까지 운행중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효과는 연간 269억원으로 일부구간에 발생되는 정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공사 및 시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부산시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교통약자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재의 일련의 상황과 미래에 예견되는 교통 혼잡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을 찾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블루라인파크사업과 관련없이 해운대교통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교통영향분석평가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A 최영곤 의원님 말씀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운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운대 전반에 걸친 교통영향분석이나 교통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Q 2017.7.31. 기준 해운대구 내 사업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신청 중인 대형공사 및 소형공사(연면적 10,000㎡ 이하) 현황과 2017.7.31. 기준 해운대구 내 사업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신청 중인 대형공사 및 소형공사(연면적 10,000㎡ 이하) 현황으로 추정해볼 때 예상되는 증가 차량수는? (증가차량 수는 1만 6천대 정도 부설주차장에 견주어 제시 했음)

A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진행 중인 대형공사는 27개소이며, 연면적 10,000㎡이하 소형공사는 131개소입니다.외부 유입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증가 대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

려운 실정인데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가 총 16,882대이며 이는 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주차 차량의 수용을 위한 것입니다.

Q 블루라인파크사업은 관광객 120만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안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LCT와 우동 중동 건축 요인등 많은 요인이 발생하는데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교통촉진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20만명이 찾아오는 사업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A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자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기는 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은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설명회(2017.8.11.)시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입장과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A 주민설명회 시 교통계획은 미포, 청사포, 송정지역의 교통 처리 방안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이며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시토록 할 것이며, 아직 총괄부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Q 블루라인파크사업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진행되고 있고 교통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A 블루라인파크사업의 교통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 측과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검토단계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안을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아무리 부산시와 공단(혹은 SPC)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따른 모든 불편과 피해는 해운대구 주민이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양자간 협약서에 어떤 중재역할을 했고,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했는지?

A 2005년, 2006년부터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선 구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화 사업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2013년 11월 경 협약서가 체결되었는데, 1차 구간에는 공원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차 구간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린레일웨이 조성 사업이 올림픽교차로에서 송정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주민 분들,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제시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최소 LCT가 준공되어서 입점하는 시점, 2020년까지는 유예를 해라, 그 구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간당 4,000~6,000대 가까운 차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해도 안 늦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2017. 11. 28. 제231회 정례회

애견교육장 조성 경과 및 계획

Q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영강관리사무소 위치에 애견주를 교육하는 장소만 조성하고, 애견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몰랐던 상황에서 지난 반여4동 주민설명회에서 약 300평에 이르는 애견 시설을 한다고 공표 되었는데, 애견주 만의 시설로 들었다면 여론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며 개인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편견 즉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며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 애견 공원이든 학교든 포괄적으로 볼 때 애견도 교육장소가 필요하고, 견주에 대해서도 교육장소가 있어야 하므로 애견 학교 조성을 계획했으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겠습니다.

Q '울산에 애견 공원을 이용하는 하루 200명의 이용객 중 약 40명이 해운대 및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반여4동에 만약 애견 교육장이 만들어진다면 부산에 거주하는 차량을 이용한 애견인들이 애견 교육장을 활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교통대책 즉 교통이나 주차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반여1,4동은 하나의 지역구라고 할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A 현재는 세월교에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좁으나 나중에 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입구도로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 반려견 놀이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을 줄일수 있도록 여름에 애견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소프트랜딩 전략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까?

A 개 물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고, 타 수도권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야외 교육장과 반려동물학교 설치시 각종 오염에 대한 대책과 다양한 돌발 사례 발생에 대한 예산 배정은 이루어 졌는지?

A 이용 반려견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입장 가능하고, 시설 바닥은 유공관 배수로와 정화조를 설치하고 배설물은 견주가 직접 수거하여 배변통에 처리합니다. 주 1회 자체 방역과 월 1회 전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방역비가 1,200만원,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3,100만원으로 총 4,300만원 정도입니다.

Q 조류에 의해서 시도 창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애완견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애완견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었을 때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의 우려가 없을까 하는 걱정애 보건소에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진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소와 부서 간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A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 애견 교육장 용어는 그 무엇이 되었든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더라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을 때 최소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케이션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무작정 어느 특정 장소에 밀어 붙이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는 요지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구정질문



손 유 정 의원

2017. 12. 8. 제231회 정례회

과연 청사 이전 바람직한가?

Q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여론 수렴과정 즉 토론회나 공청회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A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네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각별히 노력 하였습니다.

Q 18개 동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와 보고회를 하였는지, 정작 궁금해 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

A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위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Q 앞으로 청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의 동의나 설명 방법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A 금년 11월 29일에 기본용역 결과를 받았고 앞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지역 주민 여론을 또 다시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해운대구의 연간 예산액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과 관련하여 공사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재송동으로 이전할 때 용역 결과가 지금 약 89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Q 재원 계획을 주민들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계획 수립시 국·시비, 현부지 매각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A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해운대 원도심 구청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공기업 제안 방식은 있을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공기업들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유지시킨다고 생각하는지?

A 이 부분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Q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애항길 지역 주민의 편익과 가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 그 부분에 동의하며,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므로 준비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 용역은 급히 서두르면서 절차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지?

A 타당성 조사를 올리기 위해 기본 용역이 필요하고, 기본 용역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용역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Q 전임 구청장의 신청사 이전 공약에 대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 타당성 용역비 등을 편성하여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서둘렀다기 보다는 청사 신축 자체를 건립하지 말도록 하는 중앙 지침이 있었고, 그 부분이 2016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통보 되어 의회의 합의를 얻어 2차 추경에 기본용역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Q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것처럼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옮겨야 되는 당위성을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옮기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정당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것 같고, 답변서에 있듯이 용역도 절차에 맞는 조사나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법적 절차에 맞춰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A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Q 주민의견 반영 근거가 있습니까? **A** 없습니다.

Q 과연 우리 구청을 과대, 호화 청사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한 여유가 됩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보셨죠? 청사들이 우리에게 비해서 얼마나 좁은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정체성과 상징성이 약하다고 했는데, 우리 해운대는 크고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 청사가 너무 과소평가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A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반영하여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짓도록 하겠습니다.

Q 구청장님의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우리 구청사가 재송동의 신청사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이곳에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많은 해운대 주민들의 관심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청사 주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신청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청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고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는 안전 정밀검사서 B등급을 받았고, 수직 2층의 증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2016년 3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투자심사기준이 마련되어 공문이 내려왔을 당시 해운대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추경 편성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있을 타당성 용역은 부디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고민이 담긴 용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 가는 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 환 의원

2017. 12. 22. 제231회 정례회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Q 최근 실시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 입지평가 결과, 이용자 접근성, 지역 균형성, 개발 용이성, 경제성, 미래 발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송동 신청사 이전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송동 센텀시티 내 신청사 부지는 해운대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이곳에 해운대구 신청사를 이전하여 해운대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반여, 반송, 재송동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구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의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존의 위치에서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는 방법, 또 새로운 신청사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취임후 문화복합센터 두 개 부서 중동 청사 재배치, 담장과 주차장을 허물고 족욕장을 설치하였으며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구청 홍보를 했음. 노후화된 청사에 3년 동안 30여억 원의 과다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지역 갈등 및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공무원 수가 80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1,0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도 노후화 되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기본용역에 따르면 주민의 70%가 신청사 이전을 찬성하고, 30%가 존치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송동 신청사 부지 이전에는 62%가 선호하고 있고, 현 청사 부지를 38%가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은?

A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감하고 있음. 2000년도 전에는 구청장한테 신청사를 옮기거나 하는 사항의 권한이 대폭 주어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 비축 예산이 약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신청사를 지으면 700억 원~800억 원이 소요되고 청사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절차에 따라 구의회 및 구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우리 구청의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면수가 98면이나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24면이 부족한 74면으로 줄었고 주차장 차선 한면의 길이가 6m를 확보해야하나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해야 하는 구에서 오히려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500대 이상 차가 들어오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출입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 이는 법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언제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A 법정 주차면수가 89면이라고 정정 드리며,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사 내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해서 부설주차장을 확충하고자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소음과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소음과 미관저해가 좀 덜한 주차타워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재송동 신청사 부지에 약 100평 정도를 도로에 편입시켰는데 기준 단가로 1,460만원(시장 조사에 의하면 평당 3,000만원~4,000만원)으로 산정하더라도 10억이 넘기 때문에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용지이므로 공사비도 시에서 자원받고, 해당 부지만큼 시에서 땅도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변도로 영화의 전당 및 센텀중학교 앞에 도로가 한 차선이 줄었다가 늘어나고 해서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공공용지 땅 100평을 도로로 내줍니까?

A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집행할 때는 그 도로가 시 관리 주관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만, 지금 현황에서는 인도 부분에 차도만 하나 만들었을 뿐이므로 도시계획과는 상관이 없고 처분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병목 현상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현장 확인 결과 도로 부분에 인도를 차도로 하나를 만들어주면 차가 가변차선에 충분히 적용이 될수 있으며, 인도로 다니는 주민들은 해운대구청사의 공간을 도로로 만들어 다니게 하면 구청사의 어떤 면적에는 상관 없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한 것입니다.

구청을 옮김으로 하여 동서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난을 해소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화된 위험한 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신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건물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며, 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전무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신청사 이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청사 이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점 자 의원

2017. 12. 22. 제231회 정례회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Q 지금까지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2012년부터 예산 집행 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국시구비 포함 38,979천원 2018년도 405,901천원 편성 요구 했습니다.

Q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조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장의 경력 사항은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임원 확인서에 총무 4년, 회장 6년으로 총무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활동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고, 센터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2017.12.1. 자유한국당 탈당)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확인을 한 것이 맞습니까?

A 자원봉사센터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하여금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분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만약에 결격사유가 생겼는데도 지금까지 그 센터장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Q 해운대문화원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문화원이 2017.9.22. 법인으로 신설된 후 이어 11월에 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독립법인을 권고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법인이 올바른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신설후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실적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해운대문화원원의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독립 법인으로의 전환은 청장님의 의견이 중요한데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A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조직육성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했고 해운대문화원 한 단체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고유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사업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 관계가 사업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해운대문화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전문성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와 관련해서는 해운대문화원에 위탁을 주면서 의회에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법인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충분히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불법, 편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은 42만의 주민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소신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무마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의정

5분 자유 발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5분 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현황

회기별	발언자	발언자
제225회 임시회	서창우	유휴부지 활용방안 대책 촉구
	유점자	송정터널내 보행로 확보 및 차단벽 설치 요구
제226회 임시회	서정학	현황도로내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서창우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촉구
제227회 임시회	최영곤	부산 시장은 해운대를 불모로 한 실험용교통 정책(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유점자	공공성은 사라지고 해운대는 죽게되는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 이대로 둘 것인가?
	김삼수	수영강 보 · 차도 구분 구간 안전 확보에 관하여
제228회 정례회	서정학	정책이주지역내 주택가 틈새 쓰레기 수거대책 마련
	유점자	해운대구 사라진 공유재산 5천104억은 어디로?
제230회 임시회	최영곤	해운대 교통대란 주범! 블루라인파크사업을 불허하라!
	임말숙	공동주택 담당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231회 정례회	유점자	운촌마리나항개발(동백섬파괴)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명원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조영진	반려동물학교 조성부지 부적성에 대한 유감
	유점자	반려동물 문화조성 '펫 티켓' 해운대에서 시작하자!
	김삼수	10%



유희부지 활용방안 대책 촉구

제225회 임시회 / 2017. 2. 2. 서창우 의원

본 의원이 5분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운대구 좌동 백병원 앞의 부지 좌동 1427, 1428번지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건입니다. 해운대 백병원 앞에 위치한 2만 1,000㎡에 이르는 이 부지는 해운대 신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세안문화원, 좌동지구 창업지원주택, 경찰청 방범순찰대 사업이 7,000㎡의 부지에서 진행 중이며,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관리의 문제와 1만 4,000㎡의 잔여부지에 대한 공익적 활용 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공사지역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곳이 우리 해운대 신도시의 핵심 지역이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종합병원의 코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만 1,000㎡의 부지 중 불과 2,640㎡의 아세안문화원의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전체 부지의 관리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곳곳에 토사와 각종 건축자재들이 불임막 하나 없이 방치되어 미관상은 물론이고, 공사차량들의 진·출입 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성분을 알 수 없는 먼지가 가득하였으며, 바람이 강한 날에는 더욱더 극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잔여부지의 활용에 대한 공익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가 형성된 20년의 세월 동안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다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사각지역의 공터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 위생적 피해가 적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가진 부산시의 방임과 관할 해운대구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온 해당 부지의 잔여부지는 더 이상의 계획도 없는 행정적 수요대비에 대한 핑계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한 공익적 개발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는 인구대비 녹지 및 공원, 주민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공간들을 만들 마땅한 부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좌동 1428번지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는 대안을 잘 검토하여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해운대 신도시가 생성된 지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건물들은 노후하기 시작하였고, 주민복지 및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계획된 신도시는 이제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닙니다. 어쩌면 본 의원이 거론한 이 부지야말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우리 해운대구청이 우리 해운대구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지가 가지는 상징성은 단순한 부지 활용의 차원이 아닌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과 의회의 최고의 명분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자리매김해갈 것으로 판단되는 이때 무엇보다 주민복지와 여가생활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응원을 기대합니다.

5분자유발언



송정터널내 보행로 확보 및 차단벽 설치 요구

제225회 임시회 / 2017. 2. 21. 유점자 의원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백선기 구청장님께서 43만 해운대구 주민의 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동 순방을 통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5분자유 발언을 통하여 전하겠습니다.

「송정터널 내 보행로 확보 및 차단벽 설치요구」가 그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송정동을 잇는 송정터널 내에는 보행로 확보가 미비하고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송정 주민과 신도시 내 많은 보행자들이 송정과 신시가지지를 차량 없이 다니려면 달맞이길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약 1,500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갈매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했으나 교통 개념을 소홀히 해 비용 대비 효율이 적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해운대 신시가지~송정터널 내 보행로 확보와 차단벽 설치의 주말이면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만성 정체지역의 해소와 신도시 주민들의 송정 접근성을 높여 신시가지에 비하여 소외되고 같은 해운대이지만 단절된 느낌이 있는 송정지역의 원활한 소통과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정터널 내 보행로 길이 없어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관이 송정터널을 지나다 사고로 숨지기도 하였으며, 그 후 수년째 보행로 개설로 확보 및 차단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작년 말 우동, 좌동, 중동, 송정동 지역민 대표와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든 「동해남부산 폐선부지의 공원화」와 연계하는 풍부한 인프라에 송정터널 내 보행로 확보와 차단벽 설치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정터널 내 보행로 활용의 한 예로 서울시 강남구 매봉터널의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봉터널은 평일 기준 시간당 80명 정도가 이용하는 보행로인데,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음악 방송이 나오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부도로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원격 조정하는 20여 대의 스피커를 통하여 평상시에는 음악이 제공되고, 긴급재난과 사고 발생 시에는 대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개선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소외된 공간을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송정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드리고, 향후 해운대를 찾는 많은 분들이 해운대 바다와 철길, 그리고 신도시를 하나의 ‘걷자길(걷기, 자전거길)’ 연결의 한 축으로 제안합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걷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차보다 걷는 것이 더 빠른 길로 탈바꿈하는 일을 상상해 봅니다.



현황도로내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제226회 임시회 / 2017. 4. 13. 서정학 의원

반송로 877번 길은 내곡천 복개 전 건축을 위해 조성된 사유지 도로와 내곡천 정비 시 복개된 국유지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위치한 반송동 365-29번지는 93㎡ 면적의 사유지 현황도로로 2016년 9월경 현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이후 2016년 12월경 보시는 화면과 같이 철근을 이용해서 지장물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위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는 반송2동 5통과 7통 지역의 598세대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도로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수개월째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주민의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에 편입하는 방안이 불가하다면 협의 매수를 통해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황도로로서 이와 유사한 부지가 몇 곳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6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도로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왔던 현황도로인 만큼 도로교통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분자유발언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촉구

제226회 임시회 / 2017. 4. 13. 서창우 의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대표적 랜드마크(land mark)인 광안대교의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광안대교가 준공 14년 만에 드디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흑자 도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대교는 총 7.4km의 해안순환도로로 2003년 1월 정식 개통 이후 14년이 지난 올해 건설 당시의 지방채 2,290억 원을 전액 상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통행량의 급증으로 매년 200~3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도로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지출요인 중 광안대교의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지만 인접한 도로인 동서고가도로와 변영로의 유지관리비도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에서 2016년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흑자 도로로 전환되는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다의 시내 유료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 발급과 민자 투자로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이 명분이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행료를 감면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안대교 건설 당시 인접한 좌동지역의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약 58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전용되었기에 광안대교의 통행료 감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때 해운대구의회 차원에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결의안을 상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화합을 고려하여 상정을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자세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일이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전국 최다의 유료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변영로, 황령산터널,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가 폐지되었듯이 매년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내는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감면하여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할 때라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책임을 피한다고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부산광역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부산 시장은 해운대를 볼모로 한 실험용 교통정책(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227회 임시회 / 2017. 5. 18. 최영곤 의원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여타 지역에서 충분히 검증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비책이 미비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대중교통 버스 외의 차량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해운대 대다수 주민들은 그 이점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고, 해운대구의회 일부 구의원들도 성명서 발표(14명), 결의문 시도(8명), 그리고 5분발언(2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운대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은 공공성, 효율성,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43만 명이 거주하는 초밀집지역의 현 도로 환경에서 과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시의 두 부서인 대중교통과와 건축주택과의 이율배반성이다. 다시 말해 건축주택과는 건축사업의 인가를 남발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서 LCT의 경우 초기 60m, 20층에서 101층, 300m 이상 변경 인가를 하여 교통체증과 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대중교통과는 수수방관(袖手傍觀) 내지 부화뇌동(附和雷同) 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해운대에 새로 건축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산시가 인가한 건축만 해도 1만 세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또한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만덕과 센텀 간 지하대심도로 건설, 더욱이 피서철인 6~8월에 전국의 피서인파까지 고려하면 해운대는 넘쳐나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넷째, 시가 의뢰한 용역사(선일ENC)는 향후 해운대의 10년에 걸친 환경변화를 감안한 교통평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다시 말해 LCT 등 진행 중인 건축물의 입주세대 차량, 향후 신규인가 건축물의 입주세대 차량,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세대의 차량, 대심도 이용 진입차량과 피서철인 6~8월의 피서객 차량을 포함한 향후 10년 내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 해 보는가 하는 점이다. 피서객 차량과 만덕-센텀 간 대심도 이용 진입차량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상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향후 10년 내 해운대 전체의 신규입주가 총 2만 세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가구당 1.5대로 계산하면 최소 3만 대 이상 자가용 차량이 추가적으로 거리를 누빌 것이 예상된다. 끔찍한 일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뛰어넘는 중장기 교통 그랜드 플랜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섯째, 시는 과연 이곳 해운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외에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즉 해운대 진입도로 전체 구간 내지 일부 구간에 대해 동부올림픽아파트 인근 도로 확충과 같은 방안, 도로상의 상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방안,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엄격한 인·허가의 주택·건축정책, 교통 혼잡 유발원, 즉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징수 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차선책이나 가능성 있는 방안이 보다시피 분명 존재함에도, 나아가 해운대 교통 환경의 전면적 개조를 주문하는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의 주장이 있지만 간과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해운대 미래의 교통 문제를 위해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백 번 양보하더라도 2009년부터 입안된 계획이라면 부산시는 조례 등을 통해 신축건물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을 가중 부과하고, 이를 통한 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에 국비를 더해서 우회도로의 건설을 계획하는 등 중·장기 교통소통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최소한의 명분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어느 것 하나 준비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공공적 필요성만 내세워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막무가내와 무책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마지막 호소를 하는 바이다.

부산시장은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해운대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 명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여부를 판단함이 순리일 것이다. 해운대구청장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부산시장의 역점 사업이라 동조 내지 방관하지 말고,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언명하는 바이다.

5분자유발언



공공성은 사라지고 해운대는 죽게되는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 이대로 둘 것인가?

제227회 임시회 / 2017. 5. 18. 유점자 의원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와 관련,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두고 부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 부분이 소유자에 의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2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30% 이하의 나머지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꿈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말고 다 돌려주든지, 기부채납을 20년, 30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기간이 오래되면 결국 민간업자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원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 민간사업자의 제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세 군데에는 아파트 아니면 호텔 또는 콘도였습니다. 70%를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쪽의 70% 녹지가 주거시설을 위한 앞마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나온 민간공원 특례, 특혜의 한계이며, 민간업자의 잇속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경파괴와 특혜시비라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해운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LCT를 비롯하여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도 거의 사유화되어 있으며, 거기다 문탠로드를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며, 자연경관이 그야말로 명소인데, 청사포까지 개발된다면 전부 다 사유화되어서 일반인이, 즉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공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교통문제는 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익성이 변질된 채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특혜성 난개발 청사포 민간공원 특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 및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진행한다고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부산시에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운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자칫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해운대'를 '난개발하기 좋은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 시행단계, 사업과정에 대한 공론화 및 주민여론 수렴, 특혜논란 등 해운대의 허파인 문탠로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영강 보·차도 구분 구간 안전 확보에 대하여

제227회 임시회 / 2017. 5. 24. 김삼수 의원

수영강변을 비롯한 해운대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간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행자 구간과 자전거 주행자들을 위한 구분을 표시한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저 뒤편, 재송동 쪽에서 나무데크를 통해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전거 이용자가 해당 구간에서 보행자도로와의 구분 지점에 오면 미처 식별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점과 구간을 방문해 보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구분 구간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목재데크 구간에는 실선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해운대해수욕장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안내 방송이나 현수막, 도로표지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 구간의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수영강의 경우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그 구분이 새로운 위험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인근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약 10여 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보한 분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진입니다. 그 옆에 댓글을 보시면 수영강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동호회 사진을 보시면 해당 구간은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구간의 야간 식별을 위한 조치나 높이 등을 보강하여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인 해운대모래축제를 시작으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춰 구청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위한 정책이나 이벤트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해운대구 주민들도 함께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정책이주지역 내 주택가 틈새 쓰레기 수거대책 마련

제228회 정례회 / 2017. 6. 23. 서정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반송동 정책 이주지역의 열악한 주택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사이 틈새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없이 1970년대 조성된 정책 이주지역으로 1991년부터 주택결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15평 내외의 3~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집단으로 건립됨으로써 주거환경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시행된 반송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400% 등 고밀도 주거권을 형성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정책 이주지역 내 주택가 틈새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수거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송지역에는 15평 내외의 다세대 주택들이 건폐율 90%라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집단으로 건립됨으로써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간이 20~30cm 정도에 불과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택 사이의 쓰레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공간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만, 집주인들이 이 쓰레기들을 마땅히 수거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자가 창문을 통해 버린 쓰레기나 행인들이 투기한 생활 쓰레기로 추정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수거할 방법이 없고, 일부 집주인들은 막대기를 이용해 보지만 이 또한 뽀족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 주거지역의 위생환경은 오염되고, 여름철 악취 발생은 물론 혹시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가 틈새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긴 갈고리 형태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고, 행인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대부분인 만큼 공공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청에서 나서서 수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수거 대책이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틈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운대구 사라진 공유재산 5,104억원은 어디로?

제228회 정례회 / 2017. 6. 23. 유점자 의원

공유재산 부당관리 및 처분 사례에 관한 타 시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시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지 않아 보상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S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자산을 취득하면서 사권이 설정된 채로 보상하여 사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매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부터 결산 승인안 처리 중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올해에도 공유재산 관련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해운대구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공유재산은 2015년 1조 2,475억 원, 2016년 7,414억 원입니다. 2회의 기준 결산서보고서와 차액이 무려 5,104억 원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았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때마다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황 보고서와 구의회에 보고하는 공유재산 결산의 내용이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의 근거가 없는 전년도 결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의 크기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인지, 아니면 관리인력 부족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문서번호 토지정보와 7828,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서에 2016회계연도부터 명확한 대장상 근거가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새울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구가 보유한 공유자산을 새울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할 예정이라고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고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여러 차례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결산심의 후 승인을 불응했을 경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책임이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확인한 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는 본 사안에 관한 전문가인 관계공무원이 혹여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회계연도 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되어짐은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시정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관련 내용보고가 매우 부실한 점,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말일 자료 행정관리국장이 약속한 대로 각 부서별 공유재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감사담당 부서에 사라진 공유재산 5,104억 원 관련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요청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해운대 교통대란 주범! 블루라인파크 사업을 불허하라!

제230회 임시회 / 2017. 10. 24. 최영곤 의원

지난 229회 임시회, 블루라인파크 사업(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구정질문 이후 많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대부분의 해운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일환으로 '서명운동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서 구청 앞에서 일부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오늘도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그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도시 해운대의 가장 긴급한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집라인이나 케이블카 설치, 대형 상업파크 혹은 대형 리조트나 호텔 건설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은 그보다 교통환경 개선을 우선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감소하는 해운대 관광객을 붙잡고, 유인하기 위해 구상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통환경 개선은 뒷전이고, 외형적 개발에만 몰입하는 관광지 해운대는 명성의 쇠퇴와 유지능커녕 대다수 상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만 가중시켜 엄청난 저항을 야기할 것이고, 나아가 더 이상 걸만 화려한 교통지옥 해운대를 떠나는 선택도 불사할 것입니다.

지금 해운대는 인구 밀집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도로율 때문에 교통이 극도로 좋지 못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와 군은 획기적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은 우선적 과제는 외면한 채 관광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달맞이언덕 숲길 사면, 문텐로드에서 해송교 30%를 숙박 및 리조트 등 상업시설로 개발 계획한 청사포 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교통 병목구간에 위치한 야산, 반도보라빌 인근 4만㎡를 637세대 아파트 개발 계획한 우동 뉴스테이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그 예입니다. 비록 뜻있는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교통 무대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해운대 교통을 옥죄는 직·간접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LCT, BRT, 벅스코, 신세계백화점, 수영로교회, 피서철 해수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아파트, 호텔, 상가 건축 사업,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 사업과 만덕~센텀간 지하 대심도 건설 사업, 동부산관광개발 사업과 송정 집라인 및 케이블카 사업 등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은 미래의 해운대 교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또다시 미포~송정 간 4.8km 해안철길의 스카이라이프, 풍경 열차 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30년간 독점운영하며, 예상 관광객은 연간 약 300만 명, 중복 이용객은 약 800만 명이고, 유입 관광차량은 수천 대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과 진·출입로 확보가 필수조건이지만 거의 불가한 여건입니다.

사실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탄생하기까지 긴 시간의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준수해야 될 핵심 조건의 미달로 사업인가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결코 건축 인허가를 내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피해는 해운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포, 청사포, 송정 주차장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가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미포, 청사포, 송정 진·출입로는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가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유념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매년 연말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구 자체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 용역을 지금 당장 실시하여 여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구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많은 논란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와 특혜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협약서는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서 외 부산시와 주식회사 블루라인파크 간의 협약서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해운대구청과 주식회사 블루라인파크 간의 협약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약서의 내용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최대화하도록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및 진·출입로 건설에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230회 임시회 / 2017. 10. 24. 임말숙 의원

현재 해운대구 주택 현황을 보면 총 14만 5,726호이며, 이 중 공동주택이 10만 7,550호로 73.5%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수도 250개 단지로 전국 최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독립, 분리 제정하는 등 7대에 들어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감사 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등의 제정과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업 등으로 업무가 대폭 늘어난 반면 건축과 직원은 28명으로 예전에 비해 변동이 없고, 공동주택관리 전담 직원은 단 2명으로 행위허가신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청장님의 동 순방시 좌동에 배정된 공동주택 담당자가 1명뿐이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의나 문의를 하고 싶어도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직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도 많은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지역의 한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해운대구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물복지팀을 신설함에 있어 반려견 놀이공원 등 동물복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문제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도 늘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드는 데 기반을 먼저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2017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세대수 7만 2,000여 세대와 15만 6,000명의 인구수는 많지만, 공동주택 단지과 세대수는 우리 해운대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관련 업무는 강남구 같은 경우 건축과와 주택과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 2개 부서에 58명의 직원이 있으며, 공동주택 담당자만 8명이나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총정원 28명에 공동주택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 건축과의 정원이 28명입니다. 정원수가 비슷한 데를 보면 사하구와 강서구가 27명으로 정원이 거의 같은 실정인데, 사하구는 33만 8,000명의 인구입니다. 강서구는 12만 1,000명에 27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고, 우리는 42만 명에 28명이라는 직원수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건축과 직원 1인 담당 주민수도 중구의 경우 1,863명 정도 되고요.

해운대구는 1만 5,029명으로 중구에 비하면 약 8배의 차이가 납니다. 2017년 8월 31일로 똑같은 기준인데, 이 경우만 봐도 해운대구 건축과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할 때 직원 증원을 요구했고, 건축과에서도 직원 증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담팀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아파트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73%가 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남구와 같이 주택과를 별도로 두지는 못하더라도 건축과 직원 증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담팀 신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불편 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아파트 측 불만 해소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꼭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운촌 마리나항 개발(동백섬 파괴)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제231회 정례회 / 2017. 11. 20. 유점자 의원

해운대의 동백섬과 누리마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하우스는 동백림과 송림이 우거지고 동백꽃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기도 하고, 동백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절대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동백섬이 더베이101 식당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듯합니다. 동백섬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동백섬 나들이보다는 이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베이101 앞 공유수면 공간은 그들의 야외 영업장소가 되었고, 공영주차장은 그들의 지정 주차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동백섬 운촌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곳에 민간투자라는 명목으로 약 250여 척의 계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직 공무원을 앞세워 대기업에 밀어주는 전형적인 투기 형식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 개발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익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의 상업 개발에 제공함으로써 반시민적 특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백섬 문화재와 어우러진 수변공원이 아니라 마리나 개발은 친수공간을 소수가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난개발입니다.

셋째, 춘천 합류부의 유속 정체로 인한 해역 수질 오염과 마리나항만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심각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넷째, 현 더베이101 개발사업 승인 시 특혜 시비와 수변부 불법 점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마리나 개발은 특혜와 불법을 용인·방조하는 반주민적 행정으로 강력한 주민 저항을 자초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국방부와 기부 대(對) 양여 사업 형식으로 군 수영부두를 이관받는 목적에는 공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지를 민간업자의 마리나 개발 사업에 제공한다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게 돼 협약 파기나 군 수영부두 이전 관련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해수부도 방파제 건설로 민간업자 마리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특혜 행정으로 시민의 바다를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난개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운촌항 개발 사업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실과 민간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찬성 여론을 조작하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론 왜곡으로 즉시 중단과 단속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해 국고지원 이유를 밝히고, 과연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인지를 엄중히 따져야 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와 주민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 같은 점이 결여된 본 사업인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제231회 정례회 / 2017. 11. 20. 이명원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의회 제5대와 제6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제5대 의회의 16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반여2·3동과 재송동 지역이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반여2·3동과 재송동에서는 확보가 여의치 않자 반여1동의 공공청사부지를 마치 예정 부지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부지 확보를 포함한 몇 가지 조건부로 복지부 예산 7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의 내용은 '왜 부지를 엉터리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건지소를 옮기게 되면 국비를 환수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 공무원의 답변을 요약하면 '반여2·3동과 재송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조성된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신시가지 보건소와 반송보건지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취약지대로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이동진료소 운영과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고,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구비를 확보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보건지소를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보아집니다.'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현재 재송동 부지에 보건지소는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16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거론된 공공청사부지는 2010년 176회 정례회 때 다시 구정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용도가 공공청사부지였던 이 부지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어느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맞붙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행안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때였습니다. 당시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고, 결국 구청장은 약 반 년의 시간을 끌다가 결국 버스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스회사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없었던 것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지는 오랫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지난 9월 14일 준공식을 하고 기술교육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2010년 176회 정례회 당시의 구정질문 내용은 이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버스차고지로 임대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버스차고지 임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고, 그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없이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쾌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간업자에게 버스차고지로 임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당시 답변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의 법률조항과 구청이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서로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행부가 임대의 근거로 제시한 답변은 법이었고, 국토해양부는 그 법에 따른 시행령뿐 아니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답변이었던 거죠.

그 공무원의 답변은 주민을 위한 하얀 거짓말도 아니었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마음대로 뭉개버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공공청사부지가 한 번은 보건소 부지인 것처럼 가면을 쓴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민간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될 뻔한 적도 있다가 결국은 기술교육원이 들어서게 된 소위 말하는 공공청사부지의 흑역사를 저는 지금까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에피소드(episode)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사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0년 최선을 다해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2017년 오늘, 왜 그날이 다시 데자뷔(deja vu)로 떠오르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시 저는 이런 행정낭비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면 아무리 억지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린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애견공원 관련 예산 중 시비는 구의회에서 삭감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행부에서는 2017년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구비 5억 원을 다시 편성하여 결국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인 조건은 삭감 당시의 지역인 반여1·4동이 아니라 좌동에 애견시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좌동 주민과...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재송동 소재 동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의 공원 관리권을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아 공원시설 개선과 더불어 애견공원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 되기도 하였으며, 이번에는 뜬금없이 애견교육을 병자하여 다시 수영강변에 위치만 조금 이동하여 애견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사무관의 말대로 애초 장소와 다른 장소에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를 환수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예산을 통과시켰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과 같은 금액인 5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승인하면서 애견시설을 좌동에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재삼 못 박았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의원 개인을 욕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견제시스템을 무시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은 애견시설이 우리 구를 넘어 부산시에서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애견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애견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를 집행부에서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 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여1동, 좌동, 재송동, 반여4동으로 애견관련 행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졸속행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그동안 집행부의 수고에 욕의 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명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이간계나 임시방편(臨時方便)의 꼼수를 쓰지 마시고, 의회의 예산 승인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구비를 일단 반납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관 협치를 이루어내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려동물학교 조성부지 부적성에 대한 유감

제231회 정례회 / 2017. 11. 28. 조영진 의원

2017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주민의 여론조사를 받은 결과, 오늘 아침까지 접수된 것이 700명 정도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게 되면 오늘까지 1,000명 이상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학교 조성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구청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학교 조성에 대한 사업부지의 부적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해운대구는 반여4동 690-1번지 등 옛 삼창가공 부지에 반려동물학교 조성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당시 예정 부지였던 반여1동 수영강에 접한 원동고 입구에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을 백지화하는 조건으로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운영비 1억 원, 총 11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6년 2차 추경 때 부산시특별조성교부금 5억 원을 신시가지 지역에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에 있습니다. 당시 모 국장의 속기록 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2017년 본예산 때는 좌동 1370번지 인근에 조성하는 조건으로 구비 5억 원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참조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지역 선정과 예산까지도 다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좌동에 민원이 발생하니 사업을 접고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었던 반여1·4동 수영강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 다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과연 반여1·4동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여1·4동 지역에 다시 조성된다면 당시 분명히 예산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반여4동 수영강 지역이 사업부지로 부적정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여론 수렴입니다.

지난 13일 반여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려동물학교 조성에 대한 관할 동장님의 설명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발끈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여론은 어떻게 하실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십시오.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개발이 아닌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수영강 생태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셋째, 교통 문제입니다.

반려동물학교에 진입하려면 세월교를 지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하나 현재 차량 진·출입 교통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또한 옥봉산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시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반려동물들의 호흡기나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되어 반려동물학교 자체의 기능 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다분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10월 실시설계 용역, 11월 준공, 12월 공사 착공, 내년 1월 공사 준공, 이렇게 급한 줄속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수영강 지역은 이번 사업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학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 밀집지역이 아닌 비교적 이용이 용이한 석대 수목원에 조성하기를 적극 권장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관광 사업으로도 함께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시내의 일정한 건축물 안에 조성, 반려동물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으니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하건대, 본 의원의 건의를 한 의원의 주장으로 일축하지 마시고, 반여1·4동 주민 전체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이번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반려동물 문화조성 '펫 티켓' 해운대에서 시작하자!

제231회 정례회 / 2017. 12. 8. 유점자 의원

반려견 1,000만 시대, 지난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 대부분이 반려동물 정책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던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선자는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노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반려인구를 새로운 시장의 소비자라는 의미로 '블루슈머(bluesumer)'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에서 위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고 반려견 1,000만 시대에 있어서 행정의 책임자와 구의원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물단지 해운대구 반려동물 시설, 2년간 표류', 2017년 12월 7일 자 언론 제목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 5,000마리로 부산의 구·군에서 가장 많은 등록 수를 나타내고 있고, 미등록 동물까지 합하면 약 6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시설을 정착시켜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2015년 반여동 수영강변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들여 애견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해 무산되었고, 또 지난 2016년 9월에는 신도시 좌3동 대천공원 인근 사유지와 올해 상반기에는 재송동 동부하수종말처리장 공원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계획을 포기했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청장님!

1,000만 반려견 시대에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서겠다던 해운대구의 실천은 이대로 끝인가요?

지난 몇 차례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애견만남의 광장,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실패해서 우리들이 얻어온 교훈은 무엇이었는가요?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했던 부분과 본 사업에 관해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반성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프렌치 불독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던져진 뜨거운 화두는 펫 티켓일 것입니다. 펫 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는 신조어로 동물 등록,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의미합니다.

수영강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층을 반려동물학교로 이용하고, 야외에는 528㎡, 약 160평의 실습장을 조성하여 부산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기관 주도의 반려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반려동물학교 계획이 펫 티켓 교육의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애견만남의 광장,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전체 동료의원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1,000만 반려견 시대에 올바른 펫 티켓 교육 문화를 해운대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에 대한 펫 티켓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3개월 이상 동물과 함께하는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 등록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펫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 및 홍보활동도 운동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반려동물학교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의 계기로 만들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10%

제231회 정례회 / 2017. 12. 22. 김삼수 의원

우리는 흔히들 상위 10% 혹은 하위 10%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10%라는 용어를 통해 10%에 속하지 않는 나 자신이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다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위든 하위든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90%의 생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안 중 아동수당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만 5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위 10%는 제외하고 9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학교도 같이 입학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논리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는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득기준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일선 구청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지 부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세무관련 부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인력이 이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또한 10%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경우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 혹은 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무상급식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부유층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제였지요, 결국엔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한 대기업의 회장도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선진국인 동유럽에서도 복지예산의 누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부정수급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각종 복지 혜택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의정

칼럼 (해운대신문)

발언자	발행일	주 제
조영진	1월	정유년 새해에 즈음하여
서정학	4월	지역다움이 살아있는 관광도시 해운대를...
조영진	7월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손유정	8월	어쩌다 한국인을 읽고 한국인의 관계주의 단상
김삼수	8월	해운대 방문객 증가와 주민불편
이명원	10월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김삼수	12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정유년 새해에 즈음하여

해운대신문 1월 조영진 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는 새로운 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2017년에도 43만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해운대 발전을 위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조례 제정, 예산심의, 의원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서로 존경하고 소통하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900여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복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과도 항상 협의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해운대구에서 추진할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포 하늘전망대 준공을 시작으로 육아종합 지원센터(공립 어린이집), 인문학도서관, 기술교육원, 우3동 주민센터, 보훈회관이 건립됩니다. 수영강 시민공원 산책로정비, 반여지구 다목적저류시설 설치, 좌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8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업이 구 전역에서 추진됩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임무를 다하여 해운대가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다움〉이 살아있는 관광도시 해운대를...

해운대신문 4월 서정학 의원

제주 올레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올레길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주 올레가 주목받는 이유는 도보여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제주다움'에 있다. 제주다운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지역다움'은 타 지역과 차별적인 그 지역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는 것이다. 지역다움은 결국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일상 문화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되 대규모 투자보다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하겠다. 세계적 명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 기념비적인 건조물이 하나의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 등 기념비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것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의 명소들이다.

세계인들은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을 찾는다. 이러한 이유는 결코 화려한 시설 때문이 아니다. 인어공주 동상은 안데르센의 동화가 없었다면 한갓 동상에 불과했을 터다. 그곳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동화) 때문이다. 해운대에도 많은 전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다.

해수욕장 주변으로는 '황옥공주 전설', '해운대석각 유래', '와우산 전설', '청사포 망부송 전설' 등이 있고, 장산을 중심으로 한 '장산굴 이야기', '선바위 기우소' 등도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해운대의 모든 것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을 접목해야만 무한 경쟁시대에 진정한 명품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해운대에는 관광도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해운대~송정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해안철도 폐선구간은 해수욕장과 더불어 해운대의 녹색관광을 주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말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5차 라운드테이블을 끝으로 이 구간의 친환경적 개발계획이 결정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구남로에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광장이 조성된다. 구청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완공 후 관광도시 해운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여기서 한가지 욕심을 더 가진다면 동해남부선 폐선구간과 구남로에 해운대의 '지역다움'이 충분히 표현되었으면 한다.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처럼 세계인의 발걸음을 불러 들일 수 있는 해운대만의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해운대신문 7월 조영진 의원

지난 6월 1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과 전남 해남 지역으로 선진지 비교시찰 견학을 2박3일 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구정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위원회 비교 시찰이 되고자 상임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해남에 도착하여 공식일정인 해남군의회 방문과 친환경 생태 농업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방문을 통해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체계를 안전하게 바꾸고 소비자의 건강을 도모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수입 농산물, 유전자 변경 식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비만과 각종 질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친환경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중감소와 두뇌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어려서부터 밥을 먹는 습관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과는 별개로 안전한 쌀, 친환경 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화학비료 대신 녹비작물(풀)과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대신 천연생물방제법을 이용해 토양과 물을 살리는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살리고 나아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친환경으로 지은 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농민과 환경, 소비자가 공존하는 가장 이로운 방식의 먹거리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연제구가 학교 급식을 친환경 쌀을 전국 지자체로 공모하여 영양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품평회를 통해 선정하여 맛있고 안전한 쌀을 구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1년에 2차례 산지를 방문하여 모내기 벼 베기 체험 등을 실시하여 학교에 벼 체험포를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주식인 벼에 대해 교육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 구청은 학교현장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이를 실현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남군은 친환경농업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유기농업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천연 생물 방제제 및 미생물 공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친환경 쌀 등을 농촌과 직거래를 통해 공급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복지를 실현하고, 농촌과 도시 영남과 호남이 함께 상생하는 길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다 한국인〉을 읽고

해운대신문 8월 손유정 의원

어쩌다 한국인을 읽고 한국인의 관계주의 단상 개인주의와 조직적 집단주의는 효율성과 목적 중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술적 언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관계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은 종종 기술되는 내용보다는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훨씬 더 고려한다.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하는 데 있다. 즉 상대방과 의견 또는 감정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상대를 움직이지 못한다. 자녀에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너희도 알아서 성공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의 말이다.

그러나 자녀는 '오늘따라 말씀이 많으시다'라고 듣고 있다면 이 대화는 실패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관계주의적인 한국 사람의 대화는 축과 눈치로 행간을 읽고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이해하고 난 뒤 대답해야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된다. 가족 간 대화에도 기술적 언어보다는 소통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가 문제이다. 각자의 다양한 생각으로 의견이 일치되기 어렵고 소통이 어려운데 특히, 우리의 관계주의적 사고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관계주의적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맥락적 사고'다. 어떤 일관성보다는 그 주변적 혹은 상황적 요인을 더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즉, 누구랑 있느냐이다. 한국 사람의 정(情)을 외국인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행을 가도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음식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맛의 음미가 달라진다. 옛말에 '부모 팔아 친구를 사'는 말이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간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받기 좋았던 것도 우리의 관계주의적 문화가 작용하는 사례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 본질보다 사람, 그 사람의 환경과 주변 여건의 친밀도가 훨씬 중요한 관계요인으로 작용된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모든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문제점도 예전에 비해 세세하게 알려지고 있고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

한국 사람의 고유한 특성인 심성주의적, 인본주의적, 문화심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연구해서 사람과 환경 사회제도 시스템개선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야 한다. 어쩌다 사고 또는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분노는 나쁜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건의 핵심 타겟 한 사람, 맘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분노 표출의 대상인 한 사람이 제거되고 처벌받아야 하고 나쁜 사람 혹은 책임자가 처벌받으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분노는 필요하다. 분노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심리특성은 분노를 사람에게 풀어버리고 너무 쉽게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좀 더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며 사회 환경을 편견없이 바라 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관계주의적이기 때문이다.



해운대 방문객 증가와 주민불편

해운대신문 8월 김삼수 의원

연일 낮 최고 기온이 기록을 경신하고 열대야가 20여 일 빨리 왔다는 언론의 보도로 보아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최대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휴가객 또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으로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버스중앙차로제(BRT)로 더 심해진 교통체증과 치솟은 물가가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는 관광객은 대부분 외지인이다 보니 해운대 주민 입장에서선 그다지 반가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통체증으로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BRT 이후 30~40분이 걸리는 것도 모자라 외지인들로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졌으니 가히 교통지옥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해수욕장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나 부산시는 관광객 유치에는 관심이 많으나 관광객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온 것은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은 해운대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나 상점들은 활기를 띠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 업주 일부는 해운대 주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거주민들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연수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는 외국인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입장료를 매년 인상해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 1위로 유명한 부탄 역시 입국 가능한 외국인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탈리아나 부탄은 외국인들이 자국을 방문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복지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부산은 그리고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지역의 한 유력 인사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1천만 명 관광객이 해운대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그 분 주장대로 해운대구의 가치를 올려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올려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해운대구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을 기초단체 차원에서 확대하기는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떠나지 않는 해운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인들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는 불가능한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관계기관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해운대신문 10월 이명원 의원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오십 사년 전 오늘 어스름 새벽에 저를 낳으시느라 수고하셨던 어머니께 미역국 대신 편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했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효자는 부모 입에서 나온다고 두 분께서는 항상 저를 효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동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였다는 거 모르셨죠! 표현에 인색하셨던 아버지께서 손자를 가슴에 안고 기쁨을 전혀 감추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효도 한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페미니스트들한테 뼈도 못 추리겠지만 말입니다.

동주 나이 벌써 열세 살. 아버지께서 생전에 동주를 그렇게나 좋아하셨는데 손자 재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을 때 저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되돌아보니 어린 시절 별로 흔이 난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두 분께서는 참으로 자애롭게 우리 형제들을 키워주셨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제 나이 때는 새벽 일찍 뒷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같이 찬 물에 샤워까지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뛰어서 내려 오실만큼 아주 건강하셨죠. 가족을 생각하며 어머니께서 산에서 받아온 약수를 마시던 그 때가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삶이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시는 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고 무릎도 성치 않아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을 갚아드려야 하는데 해는 지고 길은 머니 말입니다.

어머니의 기력이 쇠해서 때리는 회초리가 아프지 않아 울었다는 어느 효자의 이야기가 오늘 더욱 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세상의 효자들처럼 잘 모시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자식의 생일날 어머니들은 몸이 아프다고 하던데. 어머니 부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부도 자주 챙기지 않고, 좋은 것 맛난 것 더 자주 사드리지도 못하는 불효자가 생일날 어스름 새벽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해운대신문 12월 김삼수 의원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라고 사전에 규정돼있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총 18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으며, 지금은 열아홉 번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87년 13대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이전에는 간접선거를 통해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87년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5공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원도 백담사로 보내게 된다.

이 또한 지금의 의미에서 본다면, 적폐청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전임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군사반란과 수뢰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른다. 당시 정치인들 중 정치보복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새삼 떠오르게 되었다. 언뜻 보면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치보복은 잘못이 없는 사람도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를 보고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적폐청산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건 간에 스스로 떳떳한 자는 아무런 위해나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서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는지는 되짚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가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 자도 법의 심판을 받아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그것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 두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소신대로 일을 해주길 바란다. 이제는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절을 지나 미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훗날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이 오늘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과연 그것이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이었는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이다.

해운대의정

의 정
스케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의정스케치



▲ 의회운영위원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의정스케치 <의정활동>



◀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 해운대구 치안정책설명회



▲ 우동 임대주택사업 취소 촉구



▲ BRT사업철회



▲ 고문변호사 위촉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스케치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인문학 도서관



▲ 구남로 문화거리



▲ 해운대기술교육원



▲ LCT현장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원전백지화를 위한 현장 방문



▲ 원전백지화를 위한 현장 방문

의정스케치 <현장방문>

◆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 해수욕장 119소방대



▲ 해수욕장 경찰

◆ 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 쓰레기 수거작업



▲ 쓰레기 분리작업

◆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결의



▲ 원전백지화 결의



▲ 원전백지화 결의

〈국내의회교류〉 의정스케치



▲ 하동군의회 내방(자매결연)



▲ 제천시의회 내방(자매결연)



▲ 서울 성동구의회 내방



▲ 마포구의회 내방



▲ 영주시의회 내방



▲ 서초구의회 내방

의정스케치 <대외의회교류, 국외연수>

◆ 해외의회 교류



▲ 일본 치쿠시노시 방문



▲ 일본 치쿠시노시 방문



▲ 필리핀 파라냐케시의회 내방



▲ 필리핀 파라냐케시의회 내방

◆ 국외연수 (홍콩, 대만, 일본, 미국)



▲ 타이베이시 의회



▲ 대만 노인복지시설



▲ 일본고베 지진메모리얼파크(개별연수)



▲ 실리콘밸리 포럼 참석(개별연수)

〈의회체험교실〉 의정스케치



의정스케치 <의원역량강화교육>



▲ 국내연수-제주



▲ 국내연수-제주(전기차박람회)



▲ 국내연수-경주



▲ 국내연수-경주



▲ 의원역량교육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 해운대구의회는

의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 참여를 위해 모든 의회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과 더욱 더 완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방청안내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안내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구의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청원안내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성명 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행처 해운대구의회 | 발행인 의장 정성철 | 편집 의회사무국

480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TEL 051-749-4091 FAX 051-749-4099 <http://council.haeundae.go.kr>